

4차산업시대 비전 모색 강원도 中企 교류의 장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2017 강원경제인페스티벌

19·20일 하이원리조트서 개최
지역 경제 인사 300여명 참석
강원경제인상 시상·강연 진행
환영만찬회·골프대회 등 다채

국내외 급변하는 경제정세 속 강원지역 경제계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비전을 모색하는 축제가 펼쳐진다.

창간 72주년을 맞은 강원일보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정선 하이원리조트 하이원호텔에서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2017 강원경제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경제계 유관 기관과 경제단체 등에서 300여명이 참석하며, 정책 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해 강원지역 경제의 나아갈 길을 논의한다.

19일 오후 3시에 시작되는 개막식에는 제11회 강원경제인상 시상식이 열리며 △창조기업상 △연구개발상 △건설혁신상 △창업성공상 △특별상 등에서 총 7,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 후 열리는 강원경제포럼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화두인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 중

소·중견기업의 중요성과 과제에 대해 최고 전문가인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이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지역 경제계 현안으로 폐광 지역 경제 자립기반 구축방안에 대해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올림픽 이후 관광 분야 레거시 창출 방안에 대해 허중욱 강원대 관광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또 김석중 강원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성조환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양민석 도 경제진흥국장, 한종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토론을 하며 환영만찬으로 교류를 이어간다. 앞서 시상식 전에는 강원경제인 국제교류협회와 강원일보CEO아카데미 수강생들도 간담회를 갖는다.

행사 이틀째인 20일에는 정영훈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강원도 중소기업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오전 8시부터 조찬강연을 한다. 또 오전 6시30분부터 하이원 CC에서 '강원경제인골프대회'가 시작되고 시상식도 열린다.

강원경제인페스티벌의 참가·숙식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 문의는 강원일보사 경제부((033)258-1340~2)로 하면 된다. 신하림기자

올림픽 호재 끝 '수주 빙하기' 건설업 생존 기로

올 7월까지 건설공사 투찰액 9134억
전년비 198억↓ 하반기 감소폭 늘듯
국토·기재부 예산 15.5~17% 줄여
도 건설계 관급공사 의존 높아 타격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호재를 끝으로 '수
주 빙하기'에 접어든 강원 건설업계가
최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결정에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
게 됐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평창
올림픽 유치 이후 고속도로와 철도 등 대

규모 SOC 확충공사를 비롯한 부동산 경
기 호재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원사가
20.7%,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원
도회 회원사는 95.7% 급증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내
년 2월 이후 대규모 공사가 감소하면서
수주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 질 전망이
다. 올들어 7월까지 도내 건설공사 투찰
금액은 9134억여원으로 전년 동기 9333
억여원보다 2.1%(198억여원) 줄었고
하반기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건설업
계는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을 올
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원으
로 책정했고, 기획재정부도 내년 SOC인
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0% 정도 줄은 17
조7000억원으로 확정, 건설업계가 생존
의 기로에 서게 됐다. 특히 강원도의 경
우 전체 공사의 70%가 관급공사로 SOC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의 SOC 예산
축소에 따른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
된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5~6%씩
감소하던 SOC 예산이 20%로 확대되면
서 강원 건설업계가 위기를 견뎌내는 것
도 한계에 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관호

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 방안



경기장	사후관리 방안	비 고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미 정	·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계올림픽 특별법개정 국가 관리 방안
정선 알파인 경기장	미 정	· 특구사업자(현대, 송담) 지속 협의
강릉 하키센터	미 정	· 대명 사후관리 운영협약 올해 4월 종료 ·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계올림픽 특별법개정 국가 관리 방안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미 정	· 경기장별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 예정 및 올림픽특별법 개정 등
관동 하키센터	미 정	· 경기장별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 예정 및 올림픽특별법 개정 등
강릉 아이스아레나	올림픽 이후 강릉시로 소유권 이관	· 강릉시-강릉하키센터 관리운영협약
보광 스노경기장	보광 측 올림픽 유산 보전	· 건설협약에 의한 장비임대차 계약
강릉 컬링센터	강릉시 복합스포츠 시설 활용 등	· 강릉시 시민체육시설 등 사후활용 계획
용평알파인 경기장	용평 측 기존 코스와 연계 활용	· 건설협약에 의한 장비임대차 계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미 정	·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계올림픽 특별법개정 국가 관리 방안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미 정	·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계올림픽 특별법개정 국가 관리 방안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	미 정	·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계올림픽 특별법개정 국가 관리 방안
올림픽플라자(개·폐회식장)	철 거	· 복합시설 활용방안 검토

도 “정부가 관리” 정부 여전히 ‘……’

■ 올림픽 사후 관리 난항

올림픽 경기장 사후 관리에 대한 정부 계
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도는 정부관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
다. 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 계획이 제
대로 서지 않으면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장 등 6개 경기장은 도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연간 64억5900만원 정도 적자가

정부 100대 국정과제서도 제외

도, 연간 64억 이상 적자 불가피

불가피하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사후관리
계획은 빠졌고 정부 예산에서도 모두 배
제됐다. 올림픽 플라자 유산조성사업
(74억원)을 비롯해 올림픽 시설 효율적

인 유지관리 및 활성화(48억원), 올림픽
아라리 생태축 조성(44억원),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52억원) 등이다. 해
당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영되지
못하면 강원도는 내년부터 직접적인 재
정부담을 떠안게 된다.

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국가관리를 위
한 법안 제 개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올림픽 특별법 제정) 작업도 난항을 겪
고 있어 예산마저 뒷받침되지 못하면 올
림픽 후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에도 차질
이 우려된다. 박지은